

2011년 G20 회의의 주요 의제와 특징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원 (dryoon@kiep.go.kr, Tel: 3460-1068)
오승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ohsh@kiep.go.kr, Tel: 3460-1228)

차 례 ●●●

1. 2011년 G20 회의 개요
2. 현재까지의 주요 의제 논의
3. 주요 성과 및 의의
4. G20 회의의 변화 전망과 과제
5. 한국의 과제와 대응방향

주요 내용 ●●●

- ▶ 올해 11월 프랑스 칸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에서부터 이어져온 균형성장, 금융개혁, 개발의제 등과 의장국인 프랑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혁 및 원자재 시장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음.
- ▶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나타난 성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이 세계경제 안정에 필요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G20의 합의기능 약화에 대한 예상과는 달리 서울 정상회의에서 IMF 지분개혁, 지난 2월 파리와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재무장관회의에서 보여준 글로벌 불균형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등 난제에서도 진전된 성과를 보여 G20의 기능이 건재함을 보임.
- ▶ 최근 일본 지진 이후 G8의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G20과 G8의 역할이 점차 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브릭스(BRICS)는 협력체적 성격을 강화하고 외연 확대를 추구하고 있어서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가 당분간 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협력의 틀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G20은 제도적 접근을 통한 글로벌 경제운영의 책임을 담당하는 반면, G8은 단기적 글로벌 경제변동 요인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전망을 보임.
 - 4월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직전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글로벌 경제·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여 영향력 강화를 꾀하였으며, 그에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새 회원국으로 영입하여 외연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G20 내에 G8과 대립하는 또 하나의 내부그룹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G20은 남유럽 재정위기나 일본의 원전사고 등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내지 못하여 현안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 우리나라는 향후 G20 진행과정 속에서 지난 서울회의에서 제시한 과제의 지속적인 실현노력을 경주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G20 내의 경합구도에 대비한 정책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브릭스의 한국영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대책, 역내협력을 통한 G20 내부의 경합구도 다양화 추구 등 다양한 G20 전략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적 리더십을 보완할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함.
 - 5월 18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국회의장 회의와 11월 개발정상회의 등을 모두 연계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1. 2011년 G20 회의 개요

- 지난 4월 15~16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워싱턴 IMF 본부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파리에서 개최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올해 11월 간느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들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글로벌 이슈들을 논의하였음.
- 회의에는 G20 국가 이외에 스페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 초청국가와 IMF, 세계은행, 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음.

표 1. G20 국가

분류	국가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중동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오세아니아	EU 의장국, 러시아, 터키, 호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 올해 11월 프랑스 간느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의제와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가 제기한 의제가 논의될 것임.
- 기존회의에서 이어지고 있는 의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원자재 시장’, ‘기후변화’, ‘개발’ 문제 등이며, 서울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금융안전망’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 프랑스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의제는 ‘국제통화시스템 개혁’으로, 세부 의제로는 자본이동 가이드라인 마련, 환율변동성 및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협력 방안, 환율정책 감독, SDR 바스켓 확대 등이 있음.

표 2. 제6차 G20 정상회의 예상 주요 이슈

분야	과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회원국별 불균형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합의 • 불균형 국가에 대한 시정조치 마련
국제통화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 관리방안 마련 • 각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활동 • 위안화의 SDR 바스켓 포함 여부 판단
금융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IFI¹⁾ 선별 및 규제체계 마련 • 장외파생상품 규제, 보상체계 개선 등 점검
원자재 시장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실물 및 파생상품시장 부문 개선방안 마련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방안 분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재원 조달방안 마련

1) G-SIFI(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국제대형금융기관.

- **간느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G20에서 논의되었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 공조 관련 의제를 넘어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임.**
- 글로벌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던 지난 1~3차 회의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경제협력 공조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음.
- 4차 회의 이후부터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G20 의제가 '위기극복'에서 '경제시스템 관리'로 전환되었음.

표 3. 1~5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장소 및 일시	주요 의제
미국 (워싱턴) 200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항 및 47개 실천과제(Action Plan)로 구성된 정상선언문 채택 -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 -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 - 국제금융체제 개편방향 - 자유무역, 시장경제 기본원칙 재확인
영국 (런던) 200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개 항의 정상선언문 및 2개 부속서 채택 -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 - 보호주의 저지 - 금융규제 및 국제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미국 (피츠버그) 200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개 항의 서문, 8개 주제와 50개 항의 본문, 2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 G20 회의 정례화 개최 합의 - 출구전략 공조 확인 - 국제금융기구 쿼터 개혁 추진 -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 금융규제 개혁 및 감독방안 마련 협의
캐나다 (토론토) 20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항의 서문, 5개 주제와 43개 항의 본문, 3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공조 합의 - 금융부분 개혁 및 규제 강화 - 국제금융기구 쿼터 이전 및 개혁 추진 -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협력 - 저개발국 지원방안 마련 협의 <p>*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합의</p>
한국 (서울) 20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 항의 정상선언문, 74개 항의 합의문, 3개의 부속서에 대해 합의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 국제금융기구(IMF 쿼터 이전 등) 개혁 추진 - 금융부분 개혁 및 감독 강화방안 협의 - 글로벌 금융안전망 - 저개발국 지원(서울 개발 컨센서스) - 보호무역 저지를 위해 협력 강화

- 2011년 개최될 간느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공식회의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3회(2, 4, 10월)를 비롯하여 총 10차례 개최될 예정임.

- 또한 공식회의 이외에도 주요 의제별 세부 협의 및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 전문가그룹 회의, 워크숍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표 4. 2011년 G20 공식회의 일정

일시	회의	장소
1.15~16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파리
1.25~26	세르파(실무준비) 회의	파리
2.18~19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파리
3월 말	세르파(실무준비) 회의	-
4.14~15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워싱턴
6월 말	세르파(실무준비) 회의	-
7.9~1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파리
9.2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워싱턴
9월 말	세르파(실무준비) 회의	-
10.14~15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파리
11.3~4	정상회의	간느

자료: 기획재정부.

2. 현재까지의 주요 의제 논의

-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전 회의에서부터 다뤄졌던 의제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추가적인 글로벌 리스크 현안들이 논의되었음.
 - 각 세션별 의제는 ① 균형성장 협력체계, ② 국제 통화시스템 개혁, ③ 금융규제 개혁, ④ 원자재 시장 개혁, ⑤ 기타 의제로 구성됨.
 - 추가적으로 논의된 글로벌 현안의제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사태와 일본 지진 등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다뤄졌음.

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 본 의제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며,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되었음.
 -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글로벌 불균형 여부를 결정하는 지수를 마련하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포괄적인 지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룸.
 - 지난 2월 파리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통합 2단계 접근법'에 합의하였으며, 이번 워싱턴 회의에

서 불균형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합의로 좀더 발전된 논의결과가 도출되었음.

- 따라서 이번 워싱턴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불균형 국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적용방식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었음.

■ 4월 워싱턴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개별 회원국의 대외불균형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음.

- 예시적 가이드라인 평가를 위해 사용될 지표들은 ①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저축률, 민간부채, ② 대외불균형 (상품·서비스 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이며, 이 경우 환율·재정·통화 정책 등도 고려되어 평가함.

■ 합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회원국의 불균형 여부가 판단되며, 1단계 불균형 평가에서 잠재적 불균형 국가로 선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불균형 여부를 평가할 네 가지 방법론도 마련되었는데, 이 중 최소 2개 기준에 의해 불균형 상태로 진단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2단계 심층평가를 진행함.

표 5. 불균형 평가의 네 가지 방법론

방법론	주요 내용
구조적 접근	• 경제모형에 개별 국가의 수치를 반영하여 평가
통계적 접근	• 역사적 추세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
횡단면 접근	•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 그룹에 대해 특정 시점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평가
사분위 접근	• 전체 G20 국가들 대비 개별 국가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평가

- 다만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의해 도출된 균형값은 향후 2차 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위한 기준일 뿐이며,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님.

- 또한 2단계 심층평가 대상국가 선정 시 G20 전체 총생산의 5%를 넘는 회원국의 경우 잠재적인 파급 전이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함.

■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본 의제는 향후 대외 지속가능성에 대한 IMF의 평가 및 회원국의 상호평가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까지 보고서가 작성되고, 11월 정상회의에서 액션플랜으로 발표될 것임.

나.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 의장국인 프랑스가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통화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는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보다는 현 국제통화체제가 야기하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세부 논의내용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대한 평가, 외환보유고 축적 야기 요인과 국가별 특성 분석, 과도한 환율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공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등이 있음.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이동의 규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 여부 논란과 관련해서 신규 통화의 SDR 바스켓 편입 시 적용할 기준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 또한 금융부문 및 재정·통화·환율 정책에 대한 IMF의 양자적·다자적 감시활동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함.

다. 금융규제 개혁

- G-SIFI 규제와 관련하여 선별과정이 진행 중이며 향후 G-SIFI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거시적 영향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 향후 G-SIFI에 대해서 강화된 관리·감독, 각국 환경을 고려한 추가 자본규제, 손실흡수 방안, 체계적 부담금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임.
- 차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까지 FSB, BIS, IMF 등이 SIFI와 관련된 정책권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함.
- 2011년 중반까지 FSB와 각국 금융당국은 G-SIFI를 선정하고, 2011년 말까지 추가 손실흡수 능력 강화 수준을 설정할 계획임.
- 추가적으로는 FSB의 역량 강화, 유사은행(shadow banking) 범위 및 규제 마련,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장외파생상품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음.

라. 원자재 시장 개혁

- 회원국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변동이 세계경제와 식량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재 현물 및 파생시장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회원국들은 원자재 시장의 투명성 제고 필요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데이터 개선, 생산·소비국 간 대화증진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지난 2월 회의의 결과에 따라 IEF, IEA, OPEC 등은 JODI²⁾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권고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

2) JODI(Joint Oil Data Initiative): 국제석유공통통계

라 관련 통계의 시의성, 완결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서울 정상회의 이후 가격변동성 논의를 석유 외 화석연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관련 국제기구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함.

■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향후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 IOSCO³⁾에 '사전적 포지션 제한' 등 정형화된 포지션 관리를 통해 시장 남용 및 왜곡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9월까지 마련하도록 함.

마. 기타 의제

■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2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재원에 대한 UN 고위급자문 그룹(AGF)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음.

- 향후 세계은행·IMF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 재원확보를 위한 분석을 시행할 것임.

■ 개발 이슈에 관해서는 지난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행동계획의 지속적 이행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음.

- 오는 9월까지 인프라 고위급 전문가 패널(HLP)을 통해 인프라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표 6.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주요 합의내용

의제	주요 합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불균형 평가를 위한 '통합 2단계 접근법' 및 '예시적 가이드라인' 합의 • 불균형 여부 평가를 위한 네 가지 방법론 합의 • 11월 갠느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 발표
국제통화 시스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이제 논의 • SDR 바스켓 편입 시 적용 기준 논의 • 환율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
금융규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IFI 선별 및 감시·감독 강화를 위한 규제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 • FSB 역량 강화, 유사은행 범위 및 규제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장외파생상품 규제에 대해 논의
원자재 시장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생산·소비·재고 통계 개선에 합의 •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감독 필요성 논의
기타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 •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행동계획의 지속적 이행 필요성의 중요성 재확인

3)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

3. 주요 성과 및 의의

■ 최근 개최된 재무장관회의에서는 G20이 세계경제 안정에 필요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함.

-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나고 나면 G20이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IMF 지분개혁의 성과를 보였고, 지난 2월 파리과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진전을 보임.
- 특히 이번에 합의된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 대부분이 불균형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스스로 자신들의 책임을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글로벌 해법 강구를 위한 상호 협력적 태도를 보임.
- G20 정상회의의 여타 합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금융시장 규제,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의 안정,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진전이 있었고, 기축통화 논의도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해법 모색을 추구하여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한국이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의제는 여전히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합의사항의 지속적인 실천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은 IMF의 SDR을 늘리는 안이 구체화되고 있어서 자기책임 없이 금융위기에 노출된 국가의 금융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 개발 이슈는 대부분의 G20 회원국이 관심을 가지고 향후 주요 의제로 계속 다루기로 합의했으나 실질적인 재원마련 부분에서 회원국간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이슈인 글로벌 통화체제 개혁과 원자재 시장의 안정성 도모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예상되므로 2011년도 G20 정상회의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이 예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글로벌 통화체제 개혁은 시장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IMF의 SDR 증가가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원자재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도 가시적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글로벌 불균형에 관한 논의와 자본이동 규제에 대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임.

4. G20 회의의 변화 전망과 과제

■ G20과 G8의 역할분화: G20과 G8은 최근 들어 역할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G20은 제도적 접근을 통한 글로벌 경제운영의 책임을 담당하는 반면, G8은 단기적 글로벌 경제변동 요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가시화되고 있음.

- G8은 일본 지진 이후 발생한 엔화의 과도한 평가절상에 대응하여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입증하였으며, G20과 차별성을 보임.
- G8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면서 많은 가용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공동의 이해가 걸려 있고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G8과 브릭스(BRICs)의 경쟁관계 대두: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직전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가지면서 글로벌 경제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G20 내에서 G8과 대립하는 또 하나의 내부그룹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함.

- 브릭스 국가들은 신흥고성장 국가들을 일컫는 명칭으로 시작된 모임이지만 최근 들어 공식적인 국가간 협력체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기존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더하여 5개국으로 확대되었음.
- 브릭스는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여보다는 기존 선진국들과의 불평등관계 시정에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어 국제사회에 대한 G20의 역할을 제한할 가능성도 존재함.
- 브릭스가 범위를 확대하여 G8과 경합하는 신흥국 모임으로 발전할 경우 G20 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양자간 대립구도가 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G20 내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정책방향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 G20의 신속 대응능력 약화: 남유럽 재정위기나 일본의 원전사고 등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관련국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G20은 사태 해결을 EU 회원국에만 맡겨놓고 있어 국제적 리스크가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일본 지진 이후 원전사고가 국제적 위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모색이나 유사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제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 G20이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무국(Secretariat)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한국의 과제와 대응방향

■ 한국이 제시한 과제의 지속적 실현노력

- 한국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두 개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및 '개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천방안들이 구체화되고 있음.
- 상기 두 개의 이슈는 이미 G20 내의 공동과제가 되었지만 한국이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동 이슈에 관한 국내 자문그룹을 형성하여 연구 지속 및 대안 제시, 액션플랜 실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한국의

기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2011년에 한국이 유치할 예정인 ‘개발정상회의’와 ‘G20 국회의장 회의(5월 18~20일)’를 통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한 이슈들의 실천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 연계지원이 필요함.

■ G20 내의 대립구도에 대비한 대응방안 준비

- 브릭스 국가들이 한국을 회원국으로 초청할 경우 한국은 브릭스가 중요한 시장들로 구성된 협력체라는 점과 향후 G20에서 이들이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임.
- 기존의 G20 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합관계는 신흥국들이 협력체를 구성하여 대응한 것이 아니므로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으나 향후에는 협력체간 경합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국이 곤혹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 G20 내에는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경합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합, 자원부국과 빈국 간의 경합 등 다양한 경합관계가 존재하므로 경합관계를 다양화하여 브릭스와 G7 간의 단일대립구도로 발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능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음.
- 한국은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을 유치하였으므로 동 정상회의를 G20 정상회의 전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협의기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G20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문가집단의 지원기능 제도화

- 한국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해체된 후 기획재정부 내에 G20기획단을 출범하여 G20 회의를 준비하는 실무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음.
- 한국이 G20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거시적 변화동향을 파악하여 정책방안을 지원하고 필요 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지원기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KIEP**